

KWDI

해외통신

2020년 11월 1차 (2020.11.1 ~ 11.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연구팀, 남성보다 여성이 만성 코로나19(코로나후유증) 가능성 크다고 발표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중 50~60대 여성이 만성 코로나19(Long-COVID) 증상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킹스칼리지런던대(King's College London) 소속 클레어 스티브 박사와 팀 스펙터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는 코로나19 증상 연구 애플리케이션(COVID Symptom Study app) 사용자 4,182명을 대상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2020년 3월 비영리 목적으로 출시된 이 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구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성 코로나19란 피로감, 두통, 호흡 곤란,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한 달 넘게 지속하는 만성 코로나19 증상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코로나19 위험도가 성별과 상관없이 비슷해졌다. 특히, 50~60대 여성의 경우 성별과 고령에 따른 위험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 만성 코로나19 위험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았다. 50~60대 여성은 18~30세 전체 남녀와 비교했을 때 만성 코로나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만성 코로나19 위험도가 2배 높았다. 스펙터 교수는 “이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면서 “류머티즘 관절염, 갑상선 질환, 루푸스 병(lupus)은 폐경을 겪기 전 남성보다 여성이 걸릴 가능성이 2~3배가량 높으며 이후에 위험도가 비슷해진다”고 분석했다. 즉,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특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성별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코로나19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티브 박사와 스펙터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건본인쇄(preprint)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이후 학술지 게재의 핵심 과정인 동료 평가(peer review)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The Guardian(2020.10.21.), “Women aged 50-60 at greatest risk of Long Covid, experts sugges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oct/21/women-aged-50-60-at-greatest-risk-of-long-covid-experts-suggest> (접속일: 2020.10.25.)
- Medrxiv.org(2020.10.19.), “Attributes and predictors of Long-COVID: analysis of COVID cases and their symptoms collected by COVID Symptoms Study App”,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10.19.20214494v1.full.pdf> (접속일: 2020.10.25.)
- GOV.UK(2020.9.22.), “Record numbers offered flu vaccine as those with flu and COVID-19 more likely to die”,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cord-numbers-offered-flu-vaccine-as-those-with-flu-and-covid-19-more-likely-to-die> (접속일: 2020.10.25.)
- COVID Symptom Study (2020.9.1.), “Healthy pregnant women do not fall more seriously ill from COVID-19”, <https://covid.joinzoe.com/post/healthy-pregnancy-covid> (접속일: 2020.10.25.)

이에 앞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과 비슷한 정도의 병세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임신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기존의 연구와 대조되는 결과다. 킹스 칼리지런던대 의료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소속 에리카 모테니 박사 등은 2020년 9월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 증상 특징과 실시간 참여를 통한 질병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들은 임산부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에는 코로나 19 증상 연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임산부 1만4천 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629명(4.49%), 병원 입원 환자는 21명(0.15%)였다. 첫 번째 그룹에서 얻은 결과는 코로나19 증상 연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임신하지 않은 여성 38만7천 명의 응답을 분석해 비교했는데, 이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2만 5천 명(6.4%), 병원 입원자는 600명(0.15%)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룹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 130만 명으로, 이중에서 4만 2천 명이 임산부였다. 임산부 4만 2천 명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2.9%, 임신하지 않은 여성 전체 여성 응답자 중 유증상자 4%로 두 그룹의 감염자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기저 질환이 없는 임산부들이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COVID-19 때문에 심각한 증상을 겪거나 회복이 더 느리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요약했다.

한편, 영국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남녀, 나이에 상관없이 장기적 만성 질병을 겪는 환자, 임산부 등 코로나19 및 독감 고위험군으로 대상으로 독감 우선 접종을 하고 있다. 해당 고위험군에만 독감 접종이 완료되면, 그다음 위험군인 50~64세를 대상으로 독감 접종을 할 예정이다.

독일 GERMANY



독일, 주 의회 남녀동등구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비판 확산

채혜원 독일통신원

2019년은 독일에서 의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남녀동등구성법(Paritätsgesetz)’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다. 2019년 2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가 의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브란덴부르크주와 튀링겐주 의회에서는 남녀동등구성법이 통과됐다. 남녀동등구성법이 시행되면 주 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을 남녀 동수로 정해야 한다. 주 의회 정당별 선거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별도의 선거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남녀 같은 수로 후보자 목록을 최종 작성하게 된다.

참고자료

- DW(2020.10.23.),
“Germany: Brandenburg court overturns gender quota for party candidate lists”,
<https://www.dw.com/en/germany-brandenburg-court-overturns-gender-quota-for-party-candidate-lists/a-55370228>
(접속일: 2020.11.02.)

하지만 극우 정당인 국가민주당(NPD)과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0월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재판소는 남녀동등구성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극우 정당은 이 법이 남성을 차별하며, 여성 의원 수가 적어 쿼터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명단에 남녀 동수를 요구하면 특정 후보가 배제될 수 있으며, 성별 비율이 불균형한 정당의 경우 남녀 동일 후보 목록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남녀동등구성법이 최종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면 오는 2024년에 주 의회의 모든 정당은 의원 후보자 명단에서 남녀 수를 동등하게 구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장인 올리케 리트케 사회민주당(SPD) 의원은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들이 의회 후보자 명단에 동등하게 오르는 것을 필수라고 보는 남녀동등구성법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주 의회 변호인도 브란덴부르크주는 헌법에 따라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 앞서 튀링겐(Thüringen)주의 의회에서도 남녀동등구성법을 통과시켰지만 1년만인 2020년 7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회민주당(SPD)과 좌파당(Linke), 녹색당(Grünen)이 함께 남녀동등구성법 시행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유권자의 자유와 평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좌파당의 수잔나 헤니그-웰소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치와 의회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갖는 의의를 부정했으며, 남녀동등구성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제한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다른 주에서 남녀동등구성법 시행을 이어가기 위해 어느 정도 헌법 수정이 가능한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두 주정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긴 했지만, 독일에서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25년까지 기독교민주당(CDU)의 여성의원 비율을 50%까지 올리기 위해 여성 쿼터 비율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독교민주당은 메르켈 총리의 제안으로 당의 내부 규칙 초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새로운 여성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에 열리는 정당 전체 회의에서 당원들의 승인을 받으면 2021년부터 기독교민주당 소속 의회 의원과 정부 인사 비율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울 계획이다. 기독교민주당은 여성의원 비율을 2023년 40%, 2025년에는 50%로 점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는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민주당이 지금까지 여성 할당제 시행을 꺼려왔지만, 이번에 추진 중인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면 독일 정치 전반에 성평등과 관련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연방의회나 주정부 의회를 살펴보면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2017년 연방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총 709석의 의석 수 중 남성 의원은 491석, 여성 의원은 218석을 차지했다. 정당별 여성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녹색당과 좌파당이 58%와 54%로 가장 높고, 사회민주당이 42%로 뒤를 이었다. 기독교민주당은 약 24%에 머물고 있으며, 자유민주당(29%)과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13%)의 여성의원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 DW(2020.07.15),
“Germany: Thuringia state removes gender parity rule for election candidates”,
<https://www.dw.com/en/germany-thuringia-state-removes-gender-parity-rule-for-election-candidates/a-54191134>
(접속일: 2020.11.02.)

- DW(2020.07.08),
“Merkel's CDU aim to fill half of party posts with women by 2025”,
<https://www.dw.com/en/merkels-cdu-aim-to-fill-half-of-party-posts-with-women-by-2025/a-54087927>
(접속일: 2020.11.04.)

- 현재 독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여성 할당제에 의존하고 있다. 1986년 녹색당이 처음으로 여성 할당제 50%를 도입했으며 사회민주당은 1988년 40% 할당제를, 좌파당은 2011년부터 50% 할당제를 도입했다. 기독교민주당은 1996년부터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유민주당과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은 여전히 여성 할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폴란드 POLAND



폴란드, 낙태금지법 강화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 계속

박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폴란드에서는 2주 넘게 수도 바르샤바 및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바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판결 때문이다. 일별 참가 인원은 상이하나 수천 명에서, 많게는 약 10만 명이 넘기도 한 것으로 추산된다.
- 2020년 10월 22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건강 문제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형 태아 낙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폭력, 근친상간,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993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에서는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을 경우, 성폭력, 근친상간,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낙태금지법 보다 낙태시술 허용 범위를 대폭 좁힌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작년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실시된 낙태 시술 1,110여 건 중 98%는 불법에 해당된다. 폴란드에서 낙태가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유는 임신부나 태아에게서 발견된 신체적 결함 또는 위험이다.
- 폴란드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널리 미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여당이자 보수정당인 Prawo i Sprawiedliwość(PIS, Law and Justice)에서 헌법재판소에 낙태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청구하여 시작된 것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가 여당에서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낙태금지법도 이미 규제가 강력해서 폴란드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매년 8~12만여 명의 폴란드 여성들이 암암리에, 또는 해외로 나가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BBC(2020.10.23.), “Poland abortion: Top court bans almost all termination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4642108> (접속일: 2020.11.8.)
- The Guardian(2020.11.03.), “Poland delays abortion ban as nationwide protests continu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03/poland-stalls-abortion-ban-amid-nationwide-protests> (접속일: 2020.11.8.)
- The Guardian(2020.11.06.), “‘A backlash against a patriarchal culture’: How Polish protests go beyond abortion right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06/a-backlash-against-a-patriarchal-culture-how-polish-protests-go-beyond-abortion-rights> (접속일: 2020.11.8.)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종교와 관계없이 여성은 낙태를 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이 도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으며, 젊은 세대 남성들의 지지와 연대도 점차 확산되면서 남성 참가자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금지 차원에서 다수가 모여 집회를 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위 규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2주 넘게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성당으로 진입하거나 점거하기도 했으며, 정부와 성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제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들을 밀치면서 경찰에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낙태 규제를 찬성하는 극우단체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공격하면서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현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폴란드 현지 여성단체 Ogólnopolski Strajk Kobiet (All-Polish Women's Strike) 대표는 시위 현장에서 “이번 시위는 비단 낙태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사회, 근본주의적 종교 국가, 그리고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국가에게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폴란드 대규모 시위가 낙태 관련 판결에 대한 반대로 점화되었지만 종교계의 정책 및 사회문화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입, 정부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억압하고 특히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들이 함께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폴란드 정부에서는 2020년 11월 3일,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법적 발효되도록 거치는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